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In

International Social Economy Policy Focus

10월 테마 – 유럽과 국제기구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

정책 In. 사회적경제를 위한 EU 정책 구상: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사례 In.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뉴스 In. 사회적경제 주요 국제행사 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정책N]에서는 2018년 유럽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Europe, SEE)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EU 정책 구상: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European Action Plan)에 관하여’을 요약하고 이와 관련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이 정책구상은 사회적경제를 유럽의 여타 사회·경제정책에 통합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도구로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¹⁾는 2021년 4분기에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행²⁾하기로 했다.

이러한 논의는 2014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³⁾ 선거에서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는 사회적기업가정신 전문가그룹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를 발표했으며, 같은 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⁴⁾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을 채택했다. 2017년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사회적경제를 유럽의 미래를 위한 사업 모델로 선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유럽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 측정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확보 및 스케일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제공 ▲유럽연합 지원프로그램 및 기금에 사회적경제 포함 ▲유럽연합 대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 ▲유럽연합기구들과 사회적경제 사이의 협력 강화 등 7가지의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관련한 이 같은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현재 의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규정된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원 문]

“The Future of EU policies for the Social Economy: towards a European Action Plan”,
Social Economy Europe, 2018

¹⁾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의 입법 기관이며 상원이다. 회원국들의 각료 1명씩으로 구성된 집단체로서, 회원 각국의 국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대변하는 정부 간 기구이다. 보통 각국의 외무장관으로 구성되고, 전문적 사항을 다룰 때만 소관 업무의 담당 장관들로 구성된다.

²⁾ 보고서에서는 2020~2025년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유럽위원회에서는 2021년 가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 2021~2026년으로 변경되었다. 관련 내용은 유럽사회적경제기구의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클릭](#)

³⁾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의 입법 기관이며 하원이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에 의해 5년에 한 번씩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주요한 입법기능은 각료 이사회가 주로 행사하지만,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로는 입법기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주도적으로 입법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정책 영역에서 수정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 정책에 대해서 조언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회는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를 감독하며 집행위원 임명 동의를 하며 불신임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예산 감독권을 가진다.

⁴⁾ 유럽집행위원회 또는 유럽위원회라 불리며 유럽연합의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시에 의해 5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다. 유럽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유럽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동체의 법령을 발의한다. 권고와 계획안 작성을 통해 위원회는 이니셔티브권과 제안권을 행사한다. 유럽연합 예산의 전안을 작성하며, EU의 공적 개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당하는데 배당된 구조기금을 관리한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1. 유럽사회적경제기구(SEE) 소개

유럽사회적경제기구(Social Economy Europe, 이하 SEE)는 2000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본래 명칭은 'CEP-CMAF(The European Standing Conference of Co-operatives, Mutual Societies, Associations and Foundations)'이다. 유럽기구와 사회적경제 간의 영구적 대화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회원으로는 협동조합, 비영리, 재단, 연합회, 윤리은행 등이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프랑스(ESS-France), 이탈리아(National Third Sector Forum), 포르투갈(Cases), 스페인(Cepes), 벨기에(ConcertES)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SEE는 유럽연합에서 사회적경제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을 보조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위한 민주성, 지역사회와의 결합,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적 경제생태계 구축 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사회·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2. 유럽연합(EU)에서 사회적경제가 갖는 중요성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사회적경제를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이하 EESC)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는 280만 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이 있고, 이들이 1,36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GDP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유럽 사회·경제에 있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직, 결사체, 재단, 사회적기업, 사회보장단체 등 다양한 기업과 조직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사람을 우선순위에 두는 철학 ▲자본 우위의 사회적 공공성 강조 ▲민주적 지배구조 ▲이윤의 사회적 환원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등의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는 ▲지속가능하며 사회통합적인 경제 발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발전 ▲성·인종·종교·장애·연령 무관한 평등 추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폭넓은 사회보장 강화 ▲세대 간 연대 등이다. 사회적경제는 이와 부합하기 때문에 미래의 기업 모델로써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3.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제안하는 이유

2015년 12월 7일에 발의된 유럽연합의정서에 '유럽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의 핵심 동인으로 사회적경제를 촉진한다'라는 조항이 담겼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6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창업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을 채택했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는 2017~2018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그 분야는 ▲자금조달 ▲판로촉진 ▲법·제도 개선 ▲사회혁신·기술·신사업발굴 ▲국제적 교류 등 5가지 영역이다. 이 정책은 2018년에 완료되어 후속 조치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17년 5월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연합 회원국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모여 유럽의 미래를 위한 사업 모델(The Social Economy, a business model for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⁵⁾로 '사회적경제'를 선언했다. 이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유럽집행위원회에 '2018~2020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2018-2020 European Action Plan)'을 적절히 재정비하여 유럽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홍보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할 것을 요청한다. 재정비된 계획은 모든 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및 사회적 응집력을 다루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에 중점을 둔 정책 시스템을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SEE는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4.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은 3가지 목표로 이뤄져 있다. 첫째, 유럽연합의 주요 사회·경제적 정책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한다. 둘째, 지역·국가·유럽연합 등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당국과의 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이 단일시장 및 유럽연합 자금 수혜 등에서 우위를 차지하

⁵⁾ 다음 기사에 마드리드 선언의 자세한 내용이 실려있다. 라이프인(2017.6.12). 마드리드 선언 "사회적경제는 유럽 연합(EU)의 미래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바로가기 [클릭](#)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고 유럽연합의 주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7가지의 우선순위, 20개의 정책 척도, 64개의 실행안을 제안한다. 우선순위 항목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럽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의 공공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재단법인, 사회보장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벨기에(2001), 스페인(2011), 포르투갈(2013), 프랑스(2014) 등은 사회적경제법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 제도화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된다.

(2)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유럽연합은 사회적경제를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이행하는데 사회적경제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이 '유엔(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는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사업모델·가치·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유럽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날'을 진행해왔는데, 이 기념일의 임팩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럽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대표 기관들을 포함하여 조직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의 국가대표 회의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목적', '민주적 거버넌스'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모델로서 인식되도록 지역단위에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유럽 사회적경제의 흐름과 진화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연구 자료를 정교화 해야 하며, 사회적경제 대표조직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이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의회, 위원회와 협력하여 가이드라인 작성, 모범 사례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하에 진행된 교육의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3)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 측정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 정책이 적극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이 거시경제에 기여했다는 신뢰할만한 통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사회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이다. 유럽연합통계국(Eurostat)⁶⁾의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위성계정에 대한 유럽국가의 공동 방법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통계기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각 국가의 통계기관에서 사회적경제 통계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으며, 훗날 유럽연합통계국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가 개발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에 대한 사회적가치 측정 방법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각각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체계화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문서화·정량화하며 각각의 사회적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위원회는 실무단을 조직해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조직들의 영향력을 정량화해 가치를 평가하고 총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도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도구들이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의 역량 측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8번째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 관련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바탕으로 유럽연합통계의 정교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8번째 중 5번 소항목에 해당하는 '남녀·청년· 장애인들의 동등한 임금을 바탕으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에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의 기여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끝으로 유럽의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보고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⁶⁾ 유럽연합통계국은 1953년 설립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의 통계 부서가 모체로 유럽연합의 공식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유럽위원회 하부의 총국이다. 유럽 연합의 통계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럽 지역의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들을 가공하고 공시하여 유럽 차원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통계국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고 회원국 통계청에서 생산되며, 이들 기관에서 조사되고 분석된 국가 단위의 데이터가 유럽연합통계국에 전달되어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자료로 가공된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4) 사회적경제기업이 유럽연합 단일시장⁷⁾에서 범국가적으로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확보, 스케일업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생태계 마련

유럽기구들은 유럽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에 대해 끊임없이 인식해왔다. 그러나 기업, 경제, 사회, 노동, 환경 등의 분야로 유럽정책을 설계할 때, 사회적경제가 갖는 뛰어난 특징 및 사업모델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이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 동등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 즉 유럽연합 차원에서 법, 경영, 정치적 조건에 맞는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법·제도가 구축되어야 사회적경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 단일시장 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중요한 장애요인을 정리하고 법제화가 이뤄졌을 때 영향력을 측정해야 한다. 영리·비영리에 대한 제한된 개념을 바꿀 수 있는 법적 연구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은 유럽연합의 영리·비영리 구분기준에 맞지 않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익 및 잉여금을 지속가능한 발전,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공이익 등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를 위한 재정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재정적 접근은 사회적경제 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유럽연합인프라투자펀드(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s)⁸⁾를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접근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재정기구가 있다. 더욱이 유럽연합투자정책(Invest EU)⁹⁾은 사회적 투자 하에 사회적경제를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규모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0%를 커버하는 선에서 2만 5천(3,500만 원)~5만 유로(7,000만원)를 보증해주고,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서는 60%를 커버하는 선에서 5만(7,000만 원)~500만 유로(69억 원)를 보증해주고 유럽연합투자정책 프로그램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50%를 커버하는 선에서 500만 유로(69억 원)를 보증해주어야 한다. 유럽연합투자정책 프로그램에서 2021~2023년 기간 동안 4억 5,000만 유로(6,200억 원)를 할당해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의 보증자금으로 60%(2억 7,000 유로/3,700억 원)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중개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9,000 유로/1,300억 원)를 할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9,000 유로/1,300억 원)는 혁신적 사회적경제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사회적경제

엑셀러레이터 프로젝트, 인큐베이터 등에 쓰여야 한다. 또한 유럽연합투자정책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대표기구의 재정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행을 비롯해서 사회적경제의 금융중개기관을 강화해야 한다. 유럽연합펀드 시스템(UND)¹⁰⁾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공인 투자자, 비적격투자자도 사회적경제기업투자목적펀드(EuSEF)¹¹⁾를 활용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들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질 높은 일자리 창출과 보전은 사회적경제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 중 하나다. 그렇기에 유럽연합 정책은 사회적경제가 이러한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 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력 하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관련한 인센티브와 정책 방법 및 모범사례를 연구해야 한다. 유럽연합 사전 예산점검(European Semester)¹²⁾에서 사회적경제가 경제적 사회적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⁷⁾ 유럽연합 단일시장은 1993년에 탄생한 것으로 회원국 간의 교역을 방해하는 모든 장벽(물리적, 기술적, 재정적, 비관세장벽 등)을 제거하여 형성된 단일 시장(내부시장)이다. 이를 통해 현재 28개 회원국은 기존 상거래에서는 대부분 단일시장을 이루어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본과 노동도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⁸⁾ 2014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안된 사회기반시설 투자기금이다. 'EU인프라투자펀드', 'EU전략투자펀드' 등으로도 불린다. 2015년 1월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은 민자 유치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150억 유로(약 39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유럽연합 지역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⁹⁾ 2021~2027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기간 중에 시행될 'Invest EU 프로그램'은 2021년 3월에 확정되었다. 총 3,720억 유로 이상의 공공 및 민간투자 창출을 목표로 경제 회복과 녹색/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중장기 EU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투자목표 달성을 위해 'InvestEU Fund'(262억 유로 규모)도 설치했다. 주요 투자분야 및 기금배분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연구, 혁신, 디지털화, ▲중소기업, ▲사회적 투자 및 기술 등이다. 특히 사회적 투자 및 기술 관련해서는 기술, 교육, 훈련, 사회적 주택, 학교, 대학, 병원, 의료, 장기요양, 소액 금융, 사회적기업, 이민자 통합, 난민, 취약계층 등인데 28억 유로(기금의 10.6%)를 책정했다.

¹⁰⁾ 유럽연합 공모 펀드 기준(UCITS)은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자유롭게 펀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1985년에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모펀드를 표준화하고, 펀드시장을 단일화해 유럽연합 자산운용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8년 말 펀드 규모는 9.3조 유로로, 유럽 전체 투자펀드(15.2조 유로)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¹¹⁾ 2013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유럽의 사회적 투자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펀드이다. 부채중서, 소액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 펀드를 출시하는 펀드운용사에게는 범 유럽연합 패스포트가 발급되기 때문에 펀드운용사들은 추가적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유럽 내 어느 지역에서도 관련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대하여

네 번째,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럽 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¹³와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한 모범 사례를 연구하고 맵핑해야 한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파트너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의 디지털 기술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이 혁신영역이나 틈새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디지털 기술의 수준과 역할을 분석해 봐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와 의회가 결합해서 디지털·사회적·기술적 변화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혁신적 해결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적·경제적·기술적·환경적 영역을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조직시켜야 한다. 유럽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경제 연구개발(R&D) 프로젝트와 혁신 클러스터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2014 신공공조달지침'¹⁴에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유보계약¹⁵과 사회적 고려에 의한 공공조달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이 신공공조달지침은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고¹⁶ 사회적경제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보계약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신공공조달지침을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구매 규정'¹⁷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따라서 신공공조달지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국가 차원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가 공공조달 규정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5) 유럽연합 지원프로그램 및 기금에 사회적경제 포함

사회적경제는 유럽연합 지원프로그램과 기금에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산업의 변화 및 사업 발전 지원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서비스 질 향상 ▲사회혁신·사회통합·자원봉사 확대 등이다.

EU의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¹⁸을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기금 투자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들이 EU의 지원프로그램, 유럽사회기금 및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¹⁹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유럽사회기금연장(European Social Fund Plus, ESF+)²⁰을 포함하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유럽단기금융펀드(Money Market Fund, MMF)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연합 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 유럽연합 대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럽연합기금, 기술적 지원, 투자환경 조성 등 외부투자계획에서 사회적경제를 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으로 사회적경제를 국가전략으로 삼는 제3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떻게 경제적 안정성 및 공정거래에 기여하는지 우수사례를 확산해야 한다.

¹² 유럽학자라고도 불리며, 유럽연합이 재정위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회원국들의 예산을 사전 점검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회원국들은 4월까지 유럽연합에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¹³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66개국 60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사업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이다.

¹⁴ 유럽연합은 2014년 4월 17일 공공계약, 공공시설, 공공사업실험약 등 3가지 형태의 공공조달을 관할하는 신공공조달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의 구매자 및 공급자 모두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조달의 구매자가 최대한의 가치를 확보하고 조달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경쟁을 보장하도록 했다.

¹⁵ 'Reserved Contract'는 장애인 기업이나 장애인 작업장 등 한정된 곳에만 공공조달 참여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¹⁶ 새 지침은 낙찰 기준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자(MEAT;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라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최저가 낙찰 기준과는 다르다. 가격 외에 비용 및 생산과정, 사회·환경적 기준, 혁신적 성격 등을 고려한 품질 기준 등을 종합해서 보기 때문이다.

¹⁷ 유럽집행위원회는 2011년 1월 28일 '사회적가치 고려 공공구매 규정'(Buying social: a guide to take account of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04년에는 '환경 고려 공공구매 규정'(buying green)을 발표하기도 했다.

¹⁸ 유럽연합 회원국의 청년 실업 해소와 소외계층 취업 등 노동문제 전반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난 1957년 설립됐다. 유럽연합은 이 기금을 통해 회원국 노동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해주는 등 매년 1000만 명 이상을 돕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8000억 유로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다.

¹⁹ 1974년 12월 파리정상회담에서 창설되었다. 유럽연합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정책 구상 :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관하여

(7) 유럽연합기구와 사회적경제간의 협력 강화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유럽기구, 회원국, 유럽연합의회, 사회적경제 대표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 유럽집행위원회 및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포럼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2019~2023년 유럽 의회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대책본부를 설립해야 하며 룩셈부르크 선언²¹⁾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며 유럽연합기구와 사회적경제 대표기관간의 지속적인 대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유럽연합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에 사회적경제 대표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내 시사점

유럽연합은 유럽사회적경제기구의 노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이사회위원회가 2021년 4분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인 인식 확산, 사회적경제기업이 거시경제에 기여한 성과 측정 등이 포함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윤호중 의원 등 15인(2020. 7. 14.)을 비롯한 6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금융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목별로 연결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측정'은 법안의 한 항목으로 '사회적 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G20, 제3세계 등 대외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관련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표와 같다.

사회적경제를 위한 유럽연합 실행계획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항목
유럽 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유로운 설립·운영 촉진과 설립요건·설립절차·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성과평가 등의 통합 및 행정간소화 방안
사회적경제기업 및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특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 사회적경제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의 집적과 통계수집에 관한 사항 ■ 공무원과 초·중·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및 시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여 측정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확보 및 스케일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사회적경제 창업 보육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 ■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및 공유거점 형성 및 확대방안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안정적 조달방안 ■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통합방향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유럽연합 지원프로그램 및 기금에 사회적경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금융·세제·관료·연구개발·조달 등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유럽연합 대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 강화	-
유럽연합기구들과 사회적경제 사이의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분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 및 지역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시도 지역재생 기반 확충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조직간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방안과 중간지원기관 육성방안

본 보고서는 이런 점에서 향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을 2021년부터 ESF+로 명명하고 6년간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은 880억 유로이다. 예산은 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탐색을 위한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21) 룩셈부르크 선언에서 2015년 4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생태계를 향한 로드맵'을 강조했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스페인이 사회적경제 정책을 공통의 가치로서 계승해나갈 것을 확인한 행사였다.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가 '사회연대경제: 주변부에서 주류로(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라는 이름으로 올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다.²²⁾

이 컨퍼런스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이룬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 조직들이 소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법체계(framework) 정비의 필요성 및 소셜 임팩트 측정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고형권 OECD 한국 대표 대사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류화 전략 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현황을 발표하는 등 국내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렸다.²³⁾

[사례In]에서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이중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소셜 임팩트 측정과 관련된 토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1. 경제 영역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²⁴⁾

"지난 15년간 사회연대경제는 큰 폭으로 확장됐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의 핵심 동인이 됐습니다." - 마티아스 콜먼 (Mathias Cormann) OECD 사무총장

컨퍼런스 첫날 열린 개막 세션에서는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참가해 '각국의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 및 활성화 방안'을 토의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통계자료를 인용해 발표했다. 사회연대경제가 유럽연합(EU) 회원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에 이른다. 고용 측면에서는 평균 6.3%를 사회연대경제 부분이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약 10%에 이른다. 캐나다의 사회적금융 조직인 데자르맹연대금고,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 등은 해당 국가 각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에 속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주류 경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가 각국 경제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OECD에서도 주요 업무로 자리 잡았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OECD는 각국 및 지역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5월부터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Promoting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²⁵⁾ 사업이다. 콜먼 사무총장은 "(이를 통해) OECD는 모든 이해 관계자가 사회연대경제에 완전히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환경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있다"며 "(관련) 법체계 설계와 소셜 임팩트 측정을 위한 국제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위기에서 발현된 사회연대경제의 힘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필요성이 잘 드러났다.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사회 일자리 권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팬데믹 기간에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고용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등 활발한 활약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올리비아 그레고리(Olivia Grégoire) 프랑스 사회연대경제책임 국무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반기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자리 감소율이 훨씬 적었다"고 발표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²²⁾ '사회연대경제: 주변부에서 주류로' 컨퍼런스는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바로가기 [클릭](#)

²³⁾ 컨퍼런스 마지막 날 진행된 OECD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고형권 주 OECD 대사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지난 4년 동안 매년 10%씩 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고용하는 직원 수도 연간 평균 5%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사회적경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 조달·소셜 임팩트 측정·기본법 통과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²⁴⁾ 해외, 특히 유럽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 대신 '사회연대경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경제(S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 재화, 서비스, 지식을 생산하며, 경제적·사회적 목적을 추구 하고, 연대를 촉진하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협회, 재단, 사회적기업과 같은 기업 및 조직(ILO, 2010)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한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7)

²⁵⁾ 국제행동에는 3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국간 파트너십을 통해 130개 조직을 아우르는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국제행동은 2022년 말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국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바로가기 [클릭](#)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ILO 사무총장도 “코로나19 보건 이슈에서 비롯된 취약하고 불균등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복구 과정이 시작됐다”면서 “사회연대경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ILO 구성원 모두가 잘 안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벨기에에서는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고용 증가율은 11.5%를 기록했고, 이탈리아 사회 협동조합의 고용 증가율은 약 20% 증가한 바 있다.

(2)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사회연대경제가 사회적·경제적 위기마다 큰 역할을 했고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와 역량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가 정치적 담론에 있었지만, 이제는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고, 경제 분야에서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이제 경제 영역 외곽이 아닌 중심부에 영향을 주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주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법체계를 구축의 필요성이다. 국가마다 편차는 있지만 현재의 법체계는 사회연대경제의 요구에 제한적이거나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공공 및 민간 부분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인된 사회연대경제 가치를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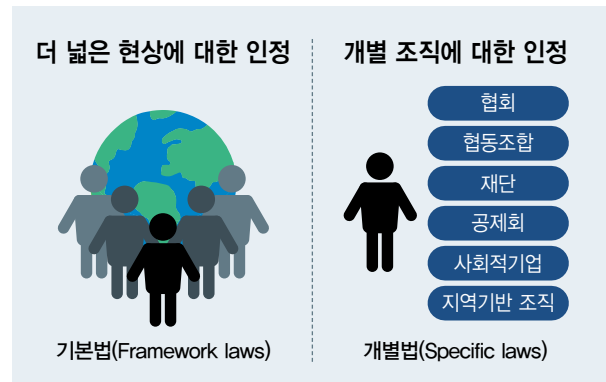
세 번째는 양적·질적으로 우량한 데이터를 수집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 지표 이외에도 사회적 영향력(소셜 임팩트) 측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거기반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줘야 하며, 국가별 정보 교류를 통해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크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사회연대경제의 힘을 기반으로 OECD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설계·개발·제공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체계 마련 방안

사회연대경제가 경제영역의 주류로 진입하고 사회혁신을 촉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진흥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9월 14일 열린 ‘효과적인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에서 OECD 회원국의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연대경제가 작동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적 체계 없이 작동하는 국가 ▲처음부터 법적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국가 ▲점진적으로 법적 체계를 만들며 국가별 상황에 맞춰 기존 법체계와 연동하는 국가 등이다.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특정한 법적 틀 없이 사회연대경제가 작동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사회연대경제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기본법을 제정했다. 한국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 멕시코 등은 법적 체계를 국가의 전반적인 맥락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림 1]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개별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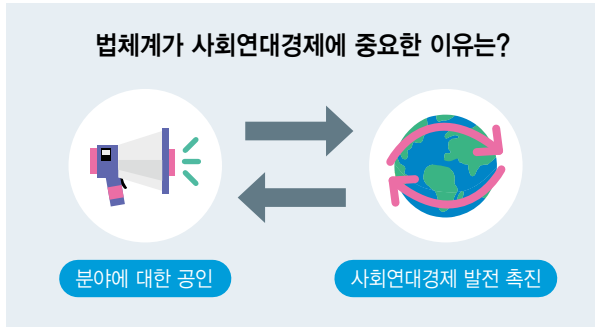
(1) 개별법 보다는 기본법이 효과적

OECD 회원 중에는 북유럽을 중심으로 16개국이 사회적기업을 규정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법’을 도입했다. 7개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처럼 사회연대경제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했고, 30개국이 추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법’(Specific Law)은 특정 조직 유형에 대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제공한다. 유럽집행위원회가 2011년 ‘사회적기업 이니셔티브(Social Business Initiative)’를 발표한 후 여러 국가에서 주목을 받았다. 발표 시기를 기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 대한 자격을 법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Framework Law)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정의하며 생태계의 경계를 분명하게 한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대중들이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

토론에서는 기본법 체계를 통한 사회연대경제 관련법 제정이 개별법 방식보다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패넬로 참여한 아말 체라이(Amal Chevreau) OECD 정책 분석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포괄법인 법체계 마련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금융 및 시장 접근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체라이 분석가는 “포괄적인 법(기본법)이 없는 국가의 경우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재정이나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자금을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연대경제 법체계에 대해 OECD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마를린 드네프(Marleen Denef) 변호사(벨기에 임팩트 변호사 법률 사무소 설립자)도 “좋은 법적 체계는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며 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주는 2013년 의회 만장일치로 ‘사회적경제법(Social Economy Act)²⁶⁾을 통과시켰다. 퀘벡 경제혁신부(사회적경제법, 협동조합법 담당) 집단창업과에 의하면, 퀘벡에서 사회연대경제 영역은 1만 1,000개의 기업, 22만 개의 일자리로 매년 470억 캐나다 달러(약 44조 6,913억 원) 수준의 매출을 창출한다. 사회적경제법 통과 덕분에 퀘벡은 주정부의 역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할 근거도 생겼다. 5년마다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 계획’을 채택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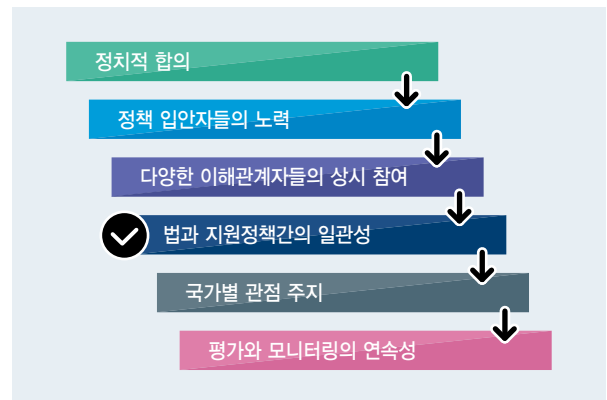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기본법)가 마련되려면 정치적 합의,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 여러 이해관계자의 상시 참여 등이 중요하다. 법체계가 마련되고 나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도구로는 주로 재정지원, 금융접근성 확보, 정부 지원기관, 공공조달 등이 있다.



[그림 3]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도구

(2) 법체계 마련 후 모니터링 필요



[그림 4]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마련의 핵심요소

법 설계와 제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체계가 마련된 후에는 법과 지원 정책의 일관성, 국가별 관점 유지, 평가와 모니터링 지속화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퀘벡은 경제혁신부 장관이 10년마다 해당 법 실행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드네프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과 룩셈부르크 등 2곳만이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가하고 있고, 다른 많은 국가에서는 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법률이 필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²⁶⁾ 이 글에서 캐나다의 ‘사회적경제법(Social Economy Act)’와 관련된 용어는 고유명사에 한해 ‘사회적경제’로 번역했다.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3. 소셜 임팩트 측정: 약인가, 독인가?

사회연대경제의 진흥을 위해 법체계 마련과 함께 강조된 사회적 영향력(소셜 임팩트) 측정에 대한 논의는 OECD 사회연대경제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9월 16일 진행되었다.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린 바실(Irene Basile) OECD 정책분석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난 10년간 사회연대경제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소셜 임팩트 측정 결과 공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리사 헤켄버거(Lisa Hehenberger) 에사데(ESADE)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현재 국제적으로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7000억 달러(약 835조 원)²⁷⁾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와 임팩트 투자가 가까워지면서 관련 시장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이 투자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영향 측정과 외부 검증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했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이미 임팩트 측정 요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조사기관인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The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 사회연대경제기업의 3분의 1이 자사의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0년 한 조사결과에서 사회적기업가의 70%가 자사의 임팩트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팩트 측정에 대한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합의된 측정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대부분 민간 기관 투자자와 민간 대기업이 임팩트 측정에 대해 대화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측정 방식을 사회연대조직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은 임팩트 측정이 더 이상 시장에서 차별화된 요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전략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도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 임팩트 측정은 사회연대경제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정 지원, 정치적·사회적 인식 및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연대조직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OECD에서 임팩트 측정과 관련한 도전과 기회를 언급하면서 보다 포용적인

(Inclusive) 임팩트 측정이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고려될 사항들과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1) OECD, 소셜 임팩트 측정 보고서 발간

OECD는 그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소셜 임팩트 측정에 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해 컨퍼런스 직전인 2021년 9월 10일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소셜 임팩트 측정(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²⁸⁾는 소셜 임팩트 측정이 필요한 이유, 한계점, 정부의 역할 등을 제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우선 측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 번째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소셜 임팩트 측정을 통해 그들이 사회에 기여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입증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소셜 임팩트 측정은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그들의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하고, 사업을 혁신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금 및 정치적·대중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셜 임팩트 측정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정책입안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근거를 과정보다 결과 중심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보다 삶의 질 및 웰빙과 같은 사회적 성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때, 소셜 임팩트 측정 정보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의 자금조달 출처가 다양화되고, 외부 투자자 및 기부자들이 갖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셜 임팩트 측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은 자금조달 접근방식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성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소셜 임팩트의 표준 설정자이자 수혜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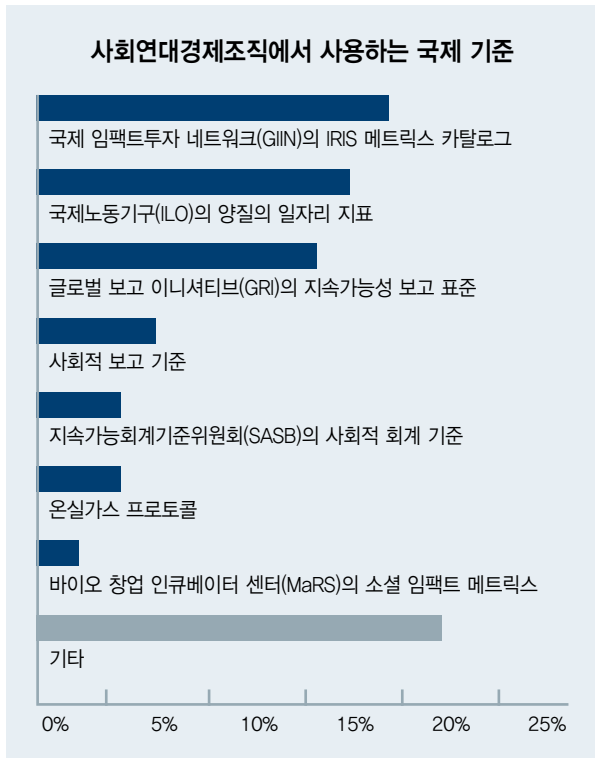
이에 따라, 소셜 임팩트 측정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임팩트 측정 표준 체계가 없다.

²⁷⁾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는 2020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를 7,150억 달러로 추산하였고, 같은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 소셜 및 임팩트 금융가가 관리하는 자산은 2,180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²⁸⁾ 이 보고서는 OECD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바로가기 [클릭](#)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OECD가 72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조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셜 임팩트 측정 기준은 GIIN(국제 임팩트투자 네트워크,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IRIS 메트릭스 카탈로그', ILO의 '양질의 일자리 지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RI 표준'으로 나타났다. OECD는 보고서 말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임팩트 측정 기준의 표준화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이슈는 어떻게 이해관계자까지를 포함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단계와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고 적용하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 소셜 임팩트 측정을 위한 정책의 역할

합의된 소셜 임팩트 측정의 구현은 사회연대경제조직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소셜 임팩트 측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동기의 부족한 경우,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재무 담당자 모두 공통 의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측정 지표, 도구, 방법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외부 요소들이 많고 복잡하며,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산출하는 사회적 자본, 웰빙, 환경문화적 성과와 같은 무형의 성과에 대해 측정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아일랜드 바실레 OECD 정책분석가는 소셜 임팩트 측정 방식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및 정책의 역할을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로,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셜 임팩트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인센티브를 설정하여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선할 수 있다. 임팩트 측정 시에 어떤 지표를 우선시 할 것인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보조금, 공공조달, 자금 등의 용도 제한(ring-fence)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가 구현해야 할 임팩트를 구체화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셜 임팩트 측정 방법론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의 경우, 비영리 분석 및 컨설팅 회사인 피네오(Phineo)가 'Social Impact Navigator'를 개발하여 지원하였고, 핀란드 정부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사례 및 조언 등을 제공하는 'Hyvän Mitta (Good Measure) project'를 제공했다.

세 번째로 정부는 임팩트 측정 증거를 생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사회연대경제의 임팩트 측정에 관한 연구를 직접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고용 사회보장부는 사회연대경제의 임팩트와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하여 접근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영국 법무부는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및 비영리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Justice Data Lab'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측정과 관련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역량 개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중개인, 자문 서비스, 특별 자금,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혁신 투자자인 'Rethink Ireland'는 피투자자에게 투자와 함께 임팩트 측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소셜 임팩트 측정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공공자원 용도 제한, 임팩트 측정 의무화 등 정책 체계 개선
- 측정 도구 설계 지원 등 방법론적 지침 제공
- 임팩트 관련 정보 대중 확산 등 지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훈련 제공 등 역량 향상 지원

OECD 사회연대경제 국제 컨퍼런스 : 주류로 부상하는 사회연대경제

(3) 사회연대경제 임팩트 측정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아일린 바실레 OECD 정책분석가는 또 소셜 임팩트 측정 방법 설계 시 집계의 용이성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가 종종 GDP에 대한 총기여도 또는 고용인 수로 측정된다”며 “측정되기 어려운 무형의 성과를 놓친다면 방법론의 수준을 높이기 어렵고, 규모가 작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차별받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이에 OECD 보고서에서는, 포용적인 방식의 사회연대경제 임팩트, 즉, 사회적 성과 측정 방식을 설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획일화된 임팩트 측정 방식을 지양하고, 두 번째로 소셜 임팩트 측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사회연대경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참여를 확대하고, 세 번째로 소셜 임팩트 측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든 사람들의 ‘웰빙’을 증진하는 것으로 삼는 것, 네 번째로 소셜 임팩트 측정의 일부로 내러티브(스토리)를 포함하는 것 등을 제안했다.²⁹⁾

4. 시사점

지난 9월에 열린 컨퍼런스는 경제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OECD가 주최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더 이상 경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주요한 의제로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사회연대경제는 기존 경제 시스템이 가진 한계가 여러 차례 드러나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기후 위기 등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제 정책의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나타난 이 같은 분위기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유럽집행위원회는 2021년 말에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European 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문제 해결에 사회연대경제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고 사람 중심적 전환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의 주요 기관으로 참여한 ILO도 2022년 6월 국제노동회의를 개최하고 ‘인간 중심의 경제활동인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³⁰⁾

OECD는 지난해 시작한 공동행동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통해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과제들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며, 2022년 말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국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³¹⁾ 특히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경제 법체계의 국제적 공조 등을 위해 OECD는 2022년 중 ‘사회연대경제 법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가이드(An international Guide on Legal Frameworks for the SSE)’를 발행할 방침이다.

2022년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례 없는 위기에서 회복된 세계 사회는 더 이상 기존 경제시스템에 머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에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²⁹⁾ OECD에서 발간한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소셜 임팩트 측정(Social Impact measurement for social solidarity Economy)” 보고서의 번역본 발간(21.11월말 예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³⁰⁾ 이외에도 ILO가 협동조합 통계 수집 시범사업을 수행할 국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뽑히는 등 한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례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유럽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사회적경제를 국내에서도 주류화하며 아시아의 선도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³¹⁾ OECD가 국제행동 일환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학습 프로젝트 ‘PLP(Peer-Learning Partnerships)’에도 우리나라가 관여한다. PLP는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6개로 구성됐으며, 이중 3개 컨소시엄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법제도 관련 컨소시엄(PL4SE, Legal Ecosystems for Social Economy Peer Learning Partnership)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사회적경제 국제화 추진 컨소시엄(SILK, Social Solidarity Economy International Learning and Knowledge Community of Peers)에서는 임팩트스퀘어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임팩트 측정 관련 컨소시엄(Stakeholder Engagement Practices in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Management and Measurement)에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한국을 대표해 연구 중이다.

사회적경제 주요 국제행사 외

1. 행사정보

[EMES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 주 최 : EMES 국제연구네트워크, GESES 연구그룹-사라고사 대학교
- 행사명 : 제8회 EMES 사회적기업 국제연구회의
- 일시/장소 : 2021. 10. 4~7, 스페인
- 주제 : 사회적기업의 협력 및 자발적 행동: 행동을 새롭게 하기 위한 원칙과 가치 제고
-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가와 사회 혁신을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만남의 장을 목표로 하는 연구회의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ICA]

- 주 최 : ICA
- 행사명 :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 일시/장소 : 2021. 12. 1~3, 대한민국 서울
- 주제 : 협동조합 정체성 강화 (Deepening our Cooperative Identity)
- 주요내용 : 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되돌아보는 행사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ocial Economy Europe]

- 주 최 : Social Economy Europe
- 행사명 : 2021 유럽 사회적경제 어워드
- 일시/장소 : 2021. 10. 12, 슬로베니아
- 주요내용 : 유럽을 중심으로 격년제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시상식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ocial Economy Intergroup]

- 주 최 : Social Economy Intergroup, Social Economy Europe
- 행사명 : 사회적경제 그룹 간 공청회
- 일시/장소 : 2021. 10. 7, 스페인
- 주요내용 : 산업 생태계로서의 사회적경제: 더 나은, 더 공정한 재건을 위한 촉매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2. 발간정보

[CIRIEC INTERNATIONAL]

- 발간기관 : CIRIEC INTERNATIONAL
- 발간시기 : 2021.
- 제목 : CIRIEC INTERNATIONAL'S CONTRIBUTION- THE 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에 대한 CIRIEC의 기여도를 정리한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DAFNE]

- 발간기관 : DAFNE, EFC
- 발간시기 : 2021.
- 제목 : Foundations and philanthropic actors Social Economy Action Plan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의 박애와 재단 및 자산활동가들의 역할 등을 담은 논문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ENSIE]

- 발간기관 : ENSIE
- 발간시기 : 2020.
- 제목 : Contribution d'ENSIE, de son réseau et des ESI au plan d'action européen pour l'économie sociale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에 대한 ENSIE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사회적경제 주요 국제행사 외

[Euclid Network]

- 발간기관 : Euclid Network
- 발간국가 : 유엔
- 발간시기 : 2021. 5.
- 제 목 : Position Paper On The European Action Plan For Social Economy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에 대한 EN의 입장을 담은 논문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EVPA]

- 발간기관 : EVPA
- 발간시기 : 2021. 7.
- 제 목 : Towards the EU Action Plan for Social Economy: EVPA's 5 recommendation
- 주요내용 : 6월 24일 진행한 정책 웨비나 'EU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영향에 대한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Federation of European SOCIAL EMPLOYERS]

- 발간기관 : Federation of European SOCIAL EMPLOYERS
- 발간시기 : 2021.
- 제 목 : EU Action Plan for Social Economy: The Social Employers position
- 주요내용 : 고용주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경제 Action Plan에 대한 입장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Interreg Europe]

- 발간기관 : Interreg Europe
- 발간시기 : 2021. 1.
- 제 목 : The social economy and support to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 주요내용 : 유럽연합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원과 우수 사례, 사회적경제 Action Plan 등의 정책 개요를 담은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ocial Economy Europe]

- 발간기관 : Social Economy Europe
- 발간시기 : 2021.
- 제 목 : The Future of EU policies for the Social Economy: Towards a European Action Plan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을 중심으로 본 EU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미래와 제언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ocial Economy Europe]

- 발간기관 : Social Economy Europe
- 발간시기 : 2021.
- 제 목 : Co-designing the 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Action Plan이 사람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경제로 가는 길을 공동설계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3. 기타동향

[COOP NEWS]

- 성 격 : 뉴스
-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EU의 역할과 사회적경제 Action Plan의 의미 등을 담은 Víctor Meseguer(Social Economy Europe 이사)와 진행한 인터뷰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 성 격 : 정보사이트
- 주요내용 : 유럽에서 진행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대한 소개 및 의미를 소개
- 참고사이트 : 바로가기 [클릭](#)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정보·사례 수집 채널

연번	기관명	주요내용
1	<p>ADDES (The Association for Development of Data on the Social Economy) 바로가기 클릭</p>	통계, 경제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 개발 등을 진행하는 협회
2	<p>ASHOKA 바로가기 클릭</p>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기업가 (Ashoka Fellows) 지원사업, 사례 소식 전달
3	<p>AVPN (Asia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바로가기 클릭</p>	아시아 벤처 자선 네트워크로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임팩트 투자, 정책, 사례 등에 주요뉴스 전달
4	<p>Big Society Capital 바로가기 클릭</p>	영국 사회투자도매은행(BSC)의 주요 활동 소식 전달
5	<p>Buy Social Canada 바로가기 클릭</p>	캐나다 바이소셜에서 진행하는 공공구매 촉진 캠페인 사례 전달
6	<p>UCC (University College Cork, Ireland) 바로가기 클릭</p>	협동조합 조직 및 개발에 대한 연구, 교육,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연구센터
7	<p>CEIS (Community Enterprise in Scotland) 바로가기 클릭</p>	영국 스코틀랜드 사회적기업에 대한 주요 센서스, 행사정보 전달
8	<p>CICOPA 바로가기 클릭</p>	ICA 산하 세계 노동자협동조합 대표조직(CICOPA) 소식 전달
9	<p>CIRIEC 바로가기 클릭</p>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보고서 퍼브리싱 사이트, ILO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협동조합 통계 생산을 위한 개념틀 가이드라인만 제시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정보·사례 수집 채널

10	<p>CIRIEC (International Centre of Research and Information on the Public, Social and Cooperative Economy) 바로가기 클릭</p>	<p>유럽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연구하는 비정부 연구조직으로 주요 연구보고서 발간, 학술컨퍼런스 소식을 전달</p>
11	<p>Civil Society Media (시민사회미디어) 바로가기 클릭</p>	<p>영국 제3섹터(자선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각종 이슈·뉴스를 전달하는 전문매체</p>
12	<p>CNAM (Conservatoire National des Arts et métiers) 바로가기 클릭</p>	<p>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 및 보급 활동 수행</p>
13	<p>CONCERTES 바로가기 클릭</p>	<p>벨기에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협회. 주요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 Centre d'Economie Sociale, Ciriec 및 CIRTES의 학계와 협력해 벨기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플랫폼 'Observatoire de l'Economie sociale'를 개발 및 운영</p>
14	<p>Cooperative UK 바로가기 클릭</p>	<p>영국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정책 옹호 활동, 캠페인, 행사, 주요사례 전달</p>
15	<p>EESC 바로가기 클릭</p>	<p>28개 회원국 89명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를 대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및 실태, 정책 파악을 목적으로 조사 실시</p>
16	<p>EMES (EMergence des Entreprises Sociales en Europe) 바로가기 클릭</p>	<p>유럽 15개국 사회적기업 연구자 네트워크로 주요 발행물, 연구행사 정보 전달</p>
17	<p>euclid.NETWORK 바로가기 클릭</p>	<p>사회적기업 관련 리소스를 제공하는 자료 라이브러리</p>
18	<p>EURICSE 바로가기 클릭</p>	<p>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조직 분야의 지식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소</p>
19	<p>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 바로가기 클릭</p>	<p>GSEF 총회 등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활동, 보고서 등 소식 전달</p>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정보·사례 수집 채널

20	<p>GSEN (Global 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p> <p>바로가기 클릭</p>	<p>언리미티드(UnLtd)에서 구축한 글로벌 사회적기업가정신 네트워크가 진행하는 행사, 회원사에 대한 소식 전달</p>
21	<p>GSG (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p> <p>바로가기 클릭</p>	<p>글로벌임팩트금융추진기구(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에서 진행하는 주요활동 소식 전달</p>
22	<p>IAIES</p> <p>바로가기 클릭</p>	<p>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하는 아르헨티나 사회적경제 연구소</p>
23	<p>ICA</p> <p>바로가기 클릭</p>	<p>협동조합의 국제연합조직(ICA) 소식 전달</p>
24	<p>IFSSE (몽블랑미팅)</p> <p>바로가기 클릭</p>	<p>프랑스 주도로 세계 사회연대경제 기업인들이 만든 국제비영리기구(3천명 가입)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총회, 이니셔티브 보고서 발간 등 주요활동 소식 전달</p>
25	<p>ILO COOP</p> <p>바로가기 클릭</p>	<p>ILO 협동조합국에서 진행하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행사 소식 전달</p>
26	<p>ILO ITC</p> <p>바로가기 클릭</p>	<p>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연 2회) 소식 전달</p>
27	<p>Impact Hub (임팩트허브)</p> <p>바로가기 클릭</p>	<p>기업가정신 육성, 사업개발 촉진 등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시작해 세계 여러 국가에 지사 보유, 사회혁신 관련 주요동향 전달</p>
28	<p>Interreg Europe</p> <p>바로가기 클릭</p>	<p>유럽의 지역 및 지방 정부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정책학습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경험 제공</p>
29	<p>Mondragon Team Academy (몬드라곤팀 아카데미)</p> <p>바로가기 클릭</p>	<p>몬드라곤에서 시작한 학습방법으로 젊은 팀 기업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 소식 전달</p>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정보·사례 수집 채널

30	<p>OECD 바로가기 클릭</p>	고용 측면의 사회적경제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8개국 14개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사 실시
31	<p>Pioneers Post (파이오니어포스트) 바로가기 클릭</p>	전 세계 사회적기업, 임팩트투자, 미션 중심 기업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 뉴스 전문매체
32	<p>Plus Acumen Journal (플러스아큐멘저널) 바로가기 클릭</p>	(예비)사회적기업가들이 사회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주는 기사 생산
33	<p>RIPES 바로가기 클릭</p>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구성된 대륙별 네트워크 간의 국제 네트워크로서 대륙 간 협력 및 사회적경제 옹호 활동 행사 소식 전달
34	<p>Skoll Foundation 바로가기 클릭</p>	전 세계 사회변화를 실현하는 다양한 제3섹터조직 사례 전달
35	<p>SOCAP (Social Capital Markets) 바로가기 클릭</p>	미국 사회적 자본시장(임팩트 투자)에 대한 행사 등 소식 전달
36	<p>Social Economy Europe 바로가기 클릭</p>	EU에서 활동하는 유럽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체 활동 전달
37	<p>Social Enterprise UK 바로가기 클릭</p>	영국사회적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캠페인(바이소셜 등), 행사, 주요사례 전달
38	<p>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스탠포드 사회혁신리뷰) 바로가기 클릭</p>	미국 스탠포드대 '자선과 시민사회센터'에서 발행하는 사회혁신&비영리분야 매체
39	<p>The Guardian (가디언) 바로가기 클릭</p>	영국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매체 중 하나로 '사회적기업' 세션에서 전 세계 사회적기업 사례 기사 생산

해외 사회적경제 동향·정보·사례 수집 채널

40	<p>Thomson Reuters Foundation (통스루이터재단) 바로가기 클릭</p>	<p>전 세계 사회적기업 글로벌 서베이를 발표하고 각종 사례·이슈 전달하는 매체 (다국적 정보기업(통스 루이터)가 설립)</p>
41	<p>UNRISD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바로가기 클릭</p>	<p>UN사회연대경제TF에서 진행하는 주요활동 및 소식 전달</p>
42	<p>WCM (TheWorldCo-operativeMonitor) 바로가기 클릭</p>	<p>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 세계 300대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를 매년 발간</p>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경제 관련 원활한 지식교류 및 정보 확산을 위해 해외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례를 격월로 발간하는 정책매거진입니다.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 이메일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 및 이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 ☎ 031-697-7774 (e-mail) jskim@ikosea.or.kr

발행인 정현곤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편집** 이로운넷

*글로벌 이슈리포트 『Zoom In』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